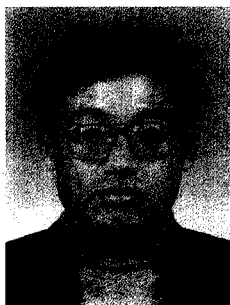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과제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서정석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부 연구원

1. 머리말

최근 정부는 민족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문화의 개발과 전승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은 역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아닌가 한다.¹⁾ 백제문화는 신라문화와 더불어 우리의 민족문화를 형성한 중요한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역시 신라문화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시책은 우리의 민족문화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또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꾀하기 위해서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충청도민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한마디로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 하나는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는 당시의 문화유적을 잘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백제문화의 보존과 정비가 단순히 문화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수요에 의한 경제성의 증대와 지역개발로 연결되리

1) 대통령공고 제134호(93. 6. 11) 및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 확정 공고(94. 10. 12), 투자계획 5개 분야 55개 사업, 사업비 1조 5,065억원, 2001년 목표.

2)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 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69쪽.

라는 기대감이다.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고 당시의 문화내용을 잘 보존하는 일은 백제문화에 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빈약한 연구자료에 허덕여 왔던 학계에서는 이번 개발사업을 계기로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혀 줄 많은 자료들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은 비단 백제사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고구려사나 신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백제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함으로써 기형적으로 성장해 왔던 우리의 고대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학계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결 도로망이 확충된단지, 도시 경관이 정비된단지 하는 여러 가지 관련 부대사업이 뒤따르게 될 터인데, 이러한 관련 사업으로 낙후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개발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이 충남도민들의 한결같은 기대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에 전혀 우려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와 민자로 계획되어 있고,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하고 당시의 문화내용을 보존할 자료들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1998년에 개발사업의 계획 내용이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도 증액되었고, 전체 사업 기간과 규모

가 증대되기는 하였지만³⁾ 여전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당시 문화내용의 입증자료와 복원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개발사업의 핵심인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였듯이 백제가 남긴 자료가 워낙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백제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 문화 내용이 후대에까지 효과적으로 전해지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적은 자료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증을 거쳐 복원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백제는 백제 나름의 문화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만큼 그러한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적절한 개발의 방향을 정한다면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발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백제문화의 입증자료와 복원자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점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충남지역의 백제유적 조사 현황

충남지역은 백제 중기와 후기의 도읍지가 있던 곳이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유적이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은 특히 당시의 도읍이 있었던 공주와 부여지역에 집중되어 있

3) 충청남도·전라북도·충남발전연구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변경계획, 1998.

는데, 이러한 제유적을 정비·복원하는 것이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는 부여에 따로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백제 문화를 좀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백제역사촌은 7개의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 개 국 촌 : 백제 개국 초의 생활상 재현
- 왕 궁 촌 : 백제의 왕도 입지, 궁궐 등의 모습을 재현
- 전통민속촌 : 백제마을, 충남의 전통마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을을 비교마을로 복원
- 산업교역촌 : 전통농업, 공업, 상업의 발전과정 재현과 특산물 판매장
- 군사통신촌 : 백제시대의 무기와 축성 등
- 풍속종교촌 : 백제이래 충남의 전통민속행사를 통한 볼거리 제공
- 장제묘지촌 : 백제의 장제와 묘제 재현

이러한 백제 역사촌의 재현은 백제문화권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볼거리를 풍성하게 하고, 백제사와 백제문화의 연구에 획기적인转机(轉機)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못 그 의의가 큰 것이 사실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분명히 백제문화권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야기

로만 들던 백제문화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기대감 못지 않게 우려되는 점도 한 둘이 아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촌을 효과적으로 장식할 자료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통민속촌이나 산업교역촌의 경우에는 아예 백제시대라는 시대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니와 이 외에도 개국촌이나 왕궁촌, 군사통신촌 등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역사촌이 효과적으로 재현될 만큼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그러한 자료들이 새롭게 확보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통한 종합개발 사업은 신라의 도움이었던 경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2년부터 대략 10년간의 사업으로 경주는 문화관광도시로의 면모를 나름대로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공주·부여 등의 백제문화권 지역은 남아 있는 문화재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게다가 신라와 달리 백제는 천도를 거듭함에 따라 관련 유적이 서울·공주·부여·익산 등지에 흩어져 있는 등의 몇 가지 이유로 개발의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백제 유적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도 절대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4)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114~120쪽.

〈표-1〉 충남지역 소재 국가사적 현황표

연번	지정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 정 일
1	4호	부여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 1-1	63. 1. 21.
2	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4	"
3	12호	공주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2	"
4	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산 5	"
5	14호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
6	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 1-1	"
7	44호	부여 군수리 사지	부여읍 군수리 19	"
8	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 565	"
9	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	"
10	60호	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 3	"
11	89호	부여 석성산성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83	"
12	90호	대흥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	"
13	99호	부여 쌍북리 요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 30-14	"
14	105호	칠백의총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52-1	"
15	109호	아산 맵씨행단	아산시 배방면 중리	"
16	112호	이 충무공 묘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 2-1	"
17	116호	해미읍성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16	"
18	135호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	64. 6. 10.
19	155호	이 충무공 유허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84 - 1	67. 3. 18.
20	156호	증산성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 88	67. 3. 25.
21	229호	매현 윤봉길 의사 사적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 40-1	72. 10. 14.
22	230호	유관순 열사 유적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용두리	72. 10. 14.
23	231호	홍주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13-1	72. 10. 14.
24	249호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 24-1	76. 12. 31.
25	301호	부여 정림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83. 3. 26.
26	307호	성주사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2	84. 8. 13.
27	316호	서산 보원사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87. 7. 18.

연번	지정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지 정 일
28	321호	죽도 앞바다, 고려청자 매장 해역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죽도 앞바다	87. 9. 18.
29	333호	공주 학봉리 도요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12	90. 8. 16.
30	334호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98	90. 10. 26.
31	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1	92. 5. 9.
32	383호	논산 돈암서원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93. 10. 18.
33	387호	우금치 전적지	공주시 금학동 산 78-1	94. 3. 17.
34	393호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 1-1	95. 8. 2.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유적이 조사되고 있지만 역사촌 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발굴조사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대부분이 백제사나 백제문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학술발굴이 아니라 도로건설이나 공장 설립에 따르는 구제 발굴이었기 때문이다. 일정한 목적 하에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정해 놓고 시작하는 발굴 작업과 곧 파괴될 유적의 현황파악을 위해 진행하는 발굴조사는 당연히 그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가 대부분 구제발굴이었다는 사실은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보면 한층 명확해진

다. 1998년 1월 현재 충남 도내에는 34개소의 국가 사적지가 있다.⁵⁾

그 중 백제시대의 유적지는 모두 18개소에 이르고 있다. 사적지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중요 기념물이다.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정해진 것이 사적이다.⁶⁾ 그러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백제 사적지에 대한 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적지는 지표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유적의 축조시기에 이론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⁷⁾ 백제유적이라서 사적으로 지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백제유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사적지로 지정된 문화재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발굴조사가

5) 충청남도, 문화재목록, 1998.

6) 문화재보호법 제6조.

부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정작 사적으로 지정된 곳의 문화내용은 참고할 수 없고, 기타 주변지역의 문화내용을 토대로 역사재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충남 도내에 자리하고 있는 백제 사적지에 대한 조사 내용이 <표-2>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조사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내용을 입증할 실질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자의 지식의 정도, 목적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남지역의 백제유적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조사는 것은 일제 식민통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일본문화와의 관계만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문화의 후진성 및 타율성, 그리고 일본문화와의 관계 등만 강조하고 유적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능산리고분군과 송산리고분군을 조사하고 이들이 왕릉임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정립사지 5층석탑 역시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고 보고, 이름도 평제탑(平濟塔)이라고 불렀다. 식민사관에 의해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당시의 조사목적이요, 결과였던 것이다. 백제문화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조사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이끌어 내는 결론은 항상 같은 것이었다.

해방 후 이러한 역사 인식은 어느 정도 불식되었지만 몇몇 병폐는 한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지역이 공주나 부여 등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물론, 이 두 지역에 많은 백제유적이 몰려 있고, 따라서 한정된 예산과 시간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두 지역에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필요는 있지만 조사지역의 편중성은 백제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외면한 채 왕을 중심으로 한 당시 특정 계층의 문화만을 확인하는데 그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해방 후 초기에는 일본인들의 그릇된 백제사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역시 유적보다는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더 많은

7)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유적이기는 하지만 계족산성은 그동안 백제산성으로 알려져 1991년에 사적 355호로 지정되었지만 최근 들어 발굴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신라산성으로 판명되었고(충남대학교박물관, 계족산성발굴조사개략보고, 1998), 서천의 건지산성 역시 백제 주류성(周留城)으로 지정되어 사적 60호로 지정·보호받아 왔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백제산성이 아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건지산성, 1998.)

〈표-2〉 충남지역 소재 백제 사적의 조사 현황

연번	지정번호	유적명	소재지	발굴조사 현황
1	4호	부여 성흥산성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 1-1	동문지, 남문지만 부분적으로 발굴
2	5호	부여 부소산성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연차적인 조사중
3	12호	공주 공산성	공주시 산성동 2	1차 발굴조사 완료, 성안마을 정비시작
4	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금성동 산 5	발굴조사 완료 정비·복원완료
5	14호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읍 능산리 산 15	발굴조사 완료 정비·복원완료
6	34호	부여 청마산성	부여읍 능산리 산 1-1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7	44호	부여 군수리사지	부여읍 군수리 19	부분조사(일제시)
8	58호	부여 나성	부여읍 염창리, 가탑리 일대	부분조사, 현황파악 안됨
9	59호	부여 청산성	부여읍 쌍북리 6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10	60호	건지산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 3	지표조사만 실시, 축성시기 파악 안됨 주류성 여부 미확인
11	89호	부여 석성산성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83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12	90호	대흥 임존성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	조사된 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임존성 여부 미확인
13	99호	부여 쌍북리요지	부여읍 쌍북리 산 30-14	조사 완료
14	135호	궁남지	부여읍 동남리 117	부분발굴, 규모 미확인
15	156호	증산성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 88	조사된바 없음, 현황파악 안됨
16	301호	부여 정림사지	부여읍 동남리 254	조사 완료, 가람배치 확인
17	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부여군 규암면 정암리 41	조사 완료
18	393호	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 1-1	지표조사만 실시, 축성시기 미확인

관심을 쏟아 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적의 구조와 규모, 원래의 형태, 복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

고 있다. 얼마 안 되는 자료마저 복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된 것이다.

1971년에 있었던 무령왕릉의 발굴은 백제사 연구뿐만 아니라 백제유적 조사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확실히 1970년대 이후의 조사는 그

이전의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빈도가 많아지고, 조사기간 또한 길어졌다. 특히, 1차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이 발표된 1978년 이후 매년 정기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온 것은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실질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백제유적이 도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먼저 밝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의식한 나머지 이러한 기초자료를 채기는 일에는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증유의 국토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순식간에 많은 유적들이 기초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1970년대의 기초조사 미비는 상당한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현재까지도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거니와 처음부터 계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여기 저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조사에 있어서의 일관성 부재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의 문제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사의 문제점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 통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약 1세

기 동안 조사가 진행되어 온 셈이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헌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백제사 연구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짝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도 남겨 놓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앞으로 백제유적의 조사와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인 셈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유적을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복원·정비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종합계획안을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것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행정당국은 당연히 백제문화의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에서는 행정당국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 취지로 본다면 95년 1월에 설립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정원이 28명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관리과와 개발과만 있을 뿐 백제문화권개발을 연구하고 기획할 부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적의 현황 파악에서부터 발굴조사, 정비·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을 위한 일련의 작업들

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산성을 조사할 때에는 먼저 지표조사를 통해 성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발굴조사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굴조사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임도 불구하고 성벽의 전체 둘레와 현황 등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 사적 4호로 지정된 성흥산성은 이미 문지(門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⁸⁾ 아직까지 성내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확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⁹⁾ 사적

58호로 지정된 부여 나성 역시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나성의 규모와 통과지점,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를 대표하는 공산성과 부소산성 역시 그 위치나 규모로 보아 도성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고, 그에 따라 10여 년에 걸쳐 장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축 시기가 언제인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¹⁰⁾

그런데, 어찌 보면 공산성이나 부소산성은 그 래도 나은 편에 속할 수도 있다. 나머지 유적들은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충남지역에는 많은 수의

8) 안승주·서정석, 성흥산성 문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1996.

9) 유원재, “백제 가림성 연구”, 백제논총 제5집,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6.

10) 공산성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안승주, 공산성,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82.
- ② 안승주·이남석, 공산성 백제 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사대 박물관, 1987.
- ③ 안승주·이남석, 공산성 성지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0.
- ④ 안승주·이남석, 공산성 건물지,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2.
- ⑤ 안승주, “웅진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19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8.
- ⑥ 성주탁, “백제 웅진성연구”, 백제연구 11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0

부소산성에 대한 보고서와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조사 중간보고, 1995.
- ② 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발굴조사보고서, 1996.
- ③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발굴조사 중간보고 Ⅱ, 1997.
- ④ 성주탁, “사비도성연구”, 백제연구 13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2
- ⑤ 윤무병, “백제왕도사비성연구”, 학술원논문집 33집(인문사회과학 편), 1994.
- ⑥ 김정보, “부소산성의 축조시기에 대한 고찰”, 역사고고학지, 1998.
- ⑦ 김용민, “부소산성의 성벽 축조기법 및 변천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26호, 1997.

백제유적이 남아 있다. 사적지만도 18개소에 이른다. 이들이 사적으로 지정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적의 성격을 공산성이나 부소산성만큼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사적으로 지정된 것이 실제로 백제유적인지의 여부에 의심이 가는 것도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이건, 아니면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유적이건 간에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기본성격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적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행정이 그러하듯이 유적의 의미나 중요도와는 무관하게 차창을 통해 바라보이는 지점을 중심으로 복원·정비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참고로 붕괴된 부분을 복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이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복원작업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포장한 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포장 작업은 자칫 유적의 성격을 왜곡하기 쉽고, 나아가 복원이 아닌 또 다른 문화유적의 파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복원작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진행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사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정 등이 담긴 청사진 - 기본계획 -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청사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백제유적의 조사와 정비,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장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자칫 국적 없는 개발사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통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사 지역이 공주와 부여 일대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조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도 있다. 도내에 남아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184점 중 절반에 가까운 74점이 이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비용을 바탕으로 백제문화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백제문화권개발이라는 것은 충남지역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이해의 측면을 생각한다면 해도 사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준비자료가 소홀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특정지구로 공주와 부여가 지정되어 있

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권개발사업의 경우 백제권에 공주·부여와 함께 청양·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¹¹⁾ 청양·예산 등지에서는 ‘백제권’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아는 것처럼 예산지역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산물인 임존성이 남아 있고, 사면석불(四面石佛)도 남아 있다. 그러나 청양지역에는 이렇다 할 백제유적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 보니 ‘백제권’이라고 이 지역을 구분한 기준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지역에 백제유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에는 앞서 지적한 임존성과 사면석불이 있다. 다만, 이 두 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이 실제로 백제유적인지, 그리고 주변에 관련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아 이 지역이 백제권이라는 것을 주저케 하는 것 뿐이다. 청양지역 역시 실제로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계봉산성, 백곡리산성, 우산성 등의 산성 유적과 강정리고분군, 화암리고분군, 대박리고분군 등의 고분 유적은 백제유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이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백

제유적으로 주장하기가 주저되는 것뿐이다.¹²⁾

이처럼 공주나 부여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백제권으로 구분되고, 도내의 모든 도민들에게 이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와 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이는 비단 이 두 지역만이 아니라 충남지역 전체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는 곧 개발사업의 준비 미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자연히 조사지역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 공주·부여지역 이외에 논산이나 서산지역이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에서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사된 유적의 종류가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시대부터 진행되어 온 충남 지역의 백제유적의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고분 관련 유적이다. 이처럼 조사분야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 역

11) 충청남도, 4대권개발경영구상연구, 1997, 159~167쪽.

1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제7집 - 청양군 편), 1992.

시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사분야와 연구 주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편중성은 백제 고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나머지 산성이라든가, 사찰, 주거지 등 관련 핵심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자연히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조성될 7개의 기능촌 중에서 장제묘지촌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촌의 경우, 재현에 있어 자료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능촌이 말 그대로 백제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와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았던 사찰, 전쟁시 피난했던 산성, 그리고 죽어서 묻혔던 고분 등이 함께 재현되어야만 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에 당시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던 가마터 같은 것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유적에 대한 올바른 실체가 구명되어야 비로소 균형 잡힌 백제사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개발사업 역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지적한 예산 임존성의 경우, 그것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성이었던 “임존성”이라는 주장¹³⁾만 제기되었을 뿐 그것이 실제로 백제시대 유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관련기록이 미비할 때에는 물적 증거가 되는 고고학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조사 조차 실시되지 않아 성내에 어떤 시설물이 남아 있는지, 성벽은 어떻게 축성되어 있는지, 유물은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는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⁴⁾ 이 성이 조사 결과 실제로 백제 임존성임이 밝혀진다면 외세에 대하여 끝까지 항전한 호국정신의 산 교육장으로서 더 없이 좋은 교육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사업 진행에 있어서 부딪치는 자료부족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고분 일변도의 조사는 앞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이 자명해 보인다.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의 문제점으로 또 한가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가 너무나 ‘백제시대’라는 시간적인 틀에 구애받은 감이 있다는 사실이다. 백제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대체로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1978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백제시대 이전 유적이나 이후의 유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13) 심정보, “백제 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3.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사적 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백제문화권개발이라는 것이 백제정신의 계승이요, 백제 얼을 되새겨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걸쳐 백제 고지(故地)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령, 비인 5층석탑, 부여 장하리 3층석탑, 계룡산 청량사지 쌍탑(남대탑) 등이 대표적인 백제계 석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석탑들이 대체로 백제가 멸망한 후 200여 년이 지난 시기에 세워진 석탑들이기는 하지만 신라문화의 바람을 200여 년간이나 쫓고 나서도 백제인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백제인들의 정신과 백제문화의 저력을 이 석탑을 통해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다시 말해서 이러한 탑들이 비록 백제시기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탑을 통해 백제인들의 정신, 그리고 거기에 깃들인 백제인들의 얼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이상 백제시대에 제작된 다른 유적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이처럼 백제 멸망 후에 백제 고지(故地)에서 생겨난 이른바 백제계 석탑이라는 것은 백제정신의 마지막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백제시대에 조성된 유물이나 유적 못지 않게 조사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볼거리가 없다고 하여 자꾸 볼거리만 만들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시멘트개발사업이 되고 말 것이다. 개발의 한계나 문제점을 슬기롭

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들을 강구하여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택이라도 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향후 개선방향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조사하는 이유가 유적을 통해 백제문화의 진수를 살피고, 거기에 스며 있는 백제의 얼과 슬기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이러한 목적과 부합될 수 있는 조사 계획의 설정 및 그에 준하는 조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는 이러한 사전 계획이 다소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한 조사지역의 편중성, 조사 분야의 편향성은 바로 이러한 사전 계획의 미흡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다. 그 이유를 한 두 마디로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충남도내에 산포(散布)되어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미흡했고, 또 현재 남아 있는 유적 중 어떤 유적을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이 미흡했던 것만큼은 또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아울러 백제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1960년대에 지정된 문화재만을 고집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서도 제시하였지만 충남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의

15) 윤용혁, “백제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74~75쪽.

대부분은 1960년대에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고, 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서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백제유적이 남아 있는 공주·부여지역에 사적지가 집중되게 되었고, 조사 역시 이 두 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한번 지정에서 누락된 유적은 계속해서 개발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중요한 유적이 방치되고, 파괴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단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기간을 요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단기적인 대안

먼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유물에 대한 지명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나 백제권 개발 등 백제관련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개발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이 미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계획이 미비된 이유는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문화재목록」은 국가, 혹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에 한해 간단한 지정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정이유나 지정된 유적·유물의 축조 시기 및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정에서 제외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 「문화재대관」에는 해당 유적이나 유물의 축조 시기와 함께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으나 이 역시 지정된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지정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채 현황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도 있다. 물론, 지정된 유적의 대부분이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와 같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적지를 지정하건 충남도에서 도지정 기념물을 지정하건 간에 문화재로 지정할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해당 유적이나 유물의 참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개발 방법도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다. 어떠한 유적이나 유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명확해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개발 방법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정문화재든 아니면 비지정문화재든 간에 충남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총망라한 백제유적·유물 지명표가 시급히 작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지명표를 바탕으로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개발 방법이 구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유적·유물 지명표를 작성한다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도 지명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충남도내에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활동이 소극적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문화재위원회를 실질적인 위원회로 성격을 탈바꿈시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화재 조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된다는지, 또 특정 분야에 조사가 편중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수렴한다면 현재와 같은 무원칙한 조사와 개발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문화재 위원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실들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 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개발의 책임자를 선정함으로써 전문위원 역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전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한가지 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유적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그것이다. 현재 국가 사적, 혹은 충남 도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는 도내의 문화유적은 대부분이 일제시대 이래의 불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그 중에는 실제로 지정기념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해방 후 계속된 조사와 연구로 지정될 당시의 가치를 상당수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한 중요한 유적임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적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통하여 꾸준히 유적의 가치와 변별력을 높이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유적임에도 개발사업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최소한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공주의 대통사지(大通寺址)는 「삼국유사」에 창건 동기와 시기가 나와 있는 대표적인 웅진시대 백제 사찰이다. 백제시대 사찰은 이미 한성시대부터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적이 확인된 예는 없다. 공주로 천도한 후 성왕 때 세워진 이 대통사지가 실제 유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백제 사찰인 셈이다. 여기에는 보물급의 석조(石槽) 1기와 당간지주(幢竿支柱) 1기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대통사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화재 지정이 없는 실정이다. 사지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와 석조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사지 자체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나

날이 민가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양의 두릉산성은 사서(史書)에 보이는 두릉윤성(豆陵尹城), 혹은 두릉이성(豆陵伊城)이라고 하는 것인데,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두릉산성은 기록에 의하면 임존성이나 주류성과 더불어 백제가 멸망한 후 3년 동안 전개한 부흥운동의 핵심 거성 중의 하나였던 곳이다. 따라서 이곳이 실제로 백제 두릉윤성임이 확실하다면 임존성이나 주류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국가 사적으로 지정 받아야 할 것이다.

부여의 왕흥사지(王興寺址) 역시 「삼국유사」에 그 창건 배경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서(史書)에 등장한 사지(寺址)와 실제 유적이 부합되는 유적이다. 부여에 남아 있는 많은 일명 사지(逸名 寺址)와 비교해 본다면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유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도지정 기념물 33호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논산의 육곡리고분군과 황산성도 마찬가지다. 육곡리고분군에서는 백제고분으로써는 유례가 드문 은제관식(銀製冠飾)이 출토되었다. 전체 고분군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유물의 희소성이나 유적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도지정 기념물 95호 보다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할 성격의 유적이다.

황산성은 계백 장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인 황산벌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산성이다.

따라서 이 산성이 황산벌 전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성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역시 발굴을 통해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이 밝혀진다면 사적지로 지정하고, 이 일대를 계백 장군의 묘소와 연결시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제역사재현단지에는 군사통신촌이 들어설 예정이거니와 이러한 황산성 일대의 산성 구조와 배치를 참고로 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재현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충남도내에 남아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재평가 작업을 통해 유적의 중요성이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되고, 개발의 당위성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문화유적의 소중함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이러한 문화유적의 재평가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당 유적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적이든 도지정 기념물이든 아무런 지정도 받지 못하여 법적 보호장치 마저 없는 유적의 경우 이러한 재평가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전문위원회에는 여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분야별로 올바른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유적의 중요성과 개발의 당위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 재현단지 조성시 예상되는 자료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와 함께 한 가지 더 단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말 그대로 백제문화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기구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토록 하고, 실제로 그러한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한다면 계획하는 사람과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른 데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할 수도 있고, 이론과 실제를 함께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개발방법을 개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연구·기획 부분이 취약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기구를 개편하여 연구·기획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내에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책임이 “사업소”에 있는 만큼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업소”에 연구인력의 보강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2) 장기적인 대안

단기적인 대안이 임시방편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대안이라면 장기적인 대안은 좀 더 거시적이고, 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치유책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의 첫째는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연구·개발할 새로운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앞에서도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지만 문제점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백제유적의 효과적인 조사와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현재에도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기구나 담당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 백제역사재현단지



그 운영을 추진할 새로운 기구가 우선 설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도 이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조사의 현황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의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는 백제사 연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백제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백제문화권 개발이라는 것이 이미 1978년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백제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손을 꼽을 정도로 적은 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적인 열세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국촌은 백제 개국 초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것이므로 개국 초의 주거지나 생활유물 등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편이다. 일반 서민들의 주거지나 관아 터가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¹⁷⁾ 다만, 최근 들어 미사리유적(漢沙里遺蹟)이 발굴되어 참고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복원을 위해

서는 아직도 절대 부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국촌에는 신석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각종 주거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¹⁷⁾ 부족한 자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폭넓은 시기의 주거지를 재현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왕궁촌은 백제의 궁궐을 재현하는 것이다. 궁궐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현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그러나 그 복원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것이 궁궐 복원을 담당한 연구자의 고백이다.¹⁸⁾ 사정은 다른 기능촌도 마찬가지다. 전통민속촌의 경우 아예 ‘백제마을, 충남의 전통 마을,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마을을 비교마을로 복원한다’고 되어 있다.¹⁹⁾ 백제마을은 밝혀진 바 없으므로 결국 시대불명의 국적 없는 마을이 되기 십상이다. 산업교역촌 역시 전통 농업·공업·상업의 발전과정 재현과 특산물 판매장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특산물 판매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립 취지나 설립되고 난 후의 긍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백제역사촌 재현이 이렇게 하나같이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자료가 부족하기

16) 다만 성터 안에서 주거지가 발견된 예는 있다. 예를 들어 부소산성 내에서 1기의 수혈주거지가 발견된 바 있으며(홍성빈·장경호, “부소산성내 수혈주거”, 문화재 17집) 천안 백석동토 성내에서도 3기의 수혈주거가 발견된 바 있다(이남석, “백석동 토성”, 한국상고사학보 29집).

17) 이강승, “고대주거지연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조사연구보고서(고건축분야), 충청남도, 1996, 9~64쪽.

18) 김동현, “고대궁궐연구”,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조사연구보고서(고건축분야), 충청남도, 1996, 162쪽.

19)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색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114~120쪽.

때문이다. 최근 들어 발굴조사가 활기를 띠면서 조사 유적의 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존의 조사라는 것이 백제문화의 실체를 밝힌다거나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학술발굴이 아니라 도로 건설이나 공장 부지 등 개발사업으로 파괴되거나 인멸될 염려가 있는 유적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구제발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조사기관들과는 달리 학술발굴만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발굴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도내에 남아 있는 사적지에 대한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황에서 밝혔듯이 도내에는 34개소의 사적지가 있고, 이중 18개소가 백제시대의 유적이다. 사적이란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을 의미하는 만큼²⁰⁾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문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완료된 곳은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 쌍북리요지, 그리고 정암리요지 등 4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거나 그마저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유적의 축조 시기, 성격, 구조, 규모 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백제문화의 실체를 재현하고

자 하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이다. 복원작업이 있을 때마다 자료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적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적지를 전담 발굴조사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백제유적·유물 지명표가 만들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도 전담기구의 몫이 될 것이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은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내용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충한다면 유적이 경주처럼 집중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넓은 지역을 쉽게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백제문화의 내용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주·부여를 벗어난 지역으로써 또 다른 백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는 서산·예산지역과 논산·연기지역 등을 우선 들 수 있다.²¹⁾

서산지역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운산면 용현리에 마애삼존불이 있고, 예산에는 덕산면 화전리에 사면석불이 있다. 이 두 지역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그 서쪽과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 더구나 마애삼존불과 지근거리에는 보원사지(사적 316호)라고 하는

20) 문화재보호법, 제6조.

큰 절터가 있고, 사면석불 주변으로도 많은 절터가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가야산 주변에는 수많은 절터와 암자가 몰려 있어 경주의 남산과 같은 곳이다. 이러한 유적들은 공주나 부여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물론, 공주나 부여에도 절터는 있지만 마애불이나 사면석불은 없으며, 시대를 달리하여 이렇게 다양한 절터가 자리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백제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으로 꾸민다면 이 지역민들에게 백제유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심어 줄 수 있고, 또한 백제유적이 갖고 있는 자료부족, 소재 빈곤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 두 지역 주변에는 앞서 설명한 가야산과 온천이 있으며, 서해안 해상국립공원이 있고, 예산에는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임존성(任存城)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들은 문화유적 감상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서산·예산지역은 공주·부여지역에 버금가는 백제문화권 특정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논산지역 마찬가지로. 논산지역은 공주·부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백제고분들이 확인되었다.²²⁾ 이러한 여러 유형의 고분들은 그 자체 중요한 학술적 자료인 동시에 일반인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종래에 백제무덤이라고 하면 서울 석촌동에 있는 적석총이나 공주 무령왕릉, 그리고 부여 능산

21) 이러한 작업도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충남지역 전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열거한 예산·서산과 논산지역은 그동안 진행된 공식·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며, 앞으로 지역별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상 지역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백제유적에 대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도내 전역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현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정책 수행에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22)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백제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윤무병, “논산 신흥리고분군 발굴조사”, 백제문화 7·8합집,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75.
- ② 안승주, “논산 표정리고분군 출토유물”, 백제문화 10집,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1977.
- ③ 윤무병, “논산 표정리고분군”, 백제연구 13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 ④ 서성훈·신광섭, “논산 표정리 폐고분”, 중도,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 ⑤ 안승주·이남석, 논산 표정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⑥ _____, 논산 육곡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6.
- ⑦ _____,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 ⑧ _____,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리고분군에 있는 석실분 등만 알고 있던 일반인들에게는 이들 지역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새로운 묘제(墓制)를 살펴보면서 새삼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논산지역에는 백제 계백 장군이 신라의 5만 군대와 맞서 최후의 전투를 벌인 현장이 남아 있고, 주변에 많은 성터도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논산지역은 백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호국정신의 역사적 현장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노력이 경주된 바 없어 당시의 전장(戰場)이었던 황산벌의 위치라든가, 계백 장군이 신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삼영(三營)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황산벌이 현재의 논산시 연산면 일대를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고,²³⁾ 삼영의 존재는 황산벌 일대에 남아 있는 산성을 대상으로 고증작업을 벌인다면 어느 정도 윤곽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지역과 소재를 동시에 늘림으로써 종래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고질적으로 따라 다니던 불거리가 없다는 불만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정확히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이다.

이밖에 사이버(CYBER) 백제역사문화관의 효과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새로운 전담기구의 몫이며, 충남 도내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각종 문화재 안내책자의 제정과 개정, 문화재 정비·복원에 대한 자문도 새로운 전담기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들이다.

장기적인 대안책으로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함께 또 한가지 들고 싶은 것은 전문인력의 양성·확보문제이다. 지금처럼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은 백제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은 백제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나아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처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설령 새로운 전담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충원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가 조직화되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의 복원이나 재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충남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역 연구자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

2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連山縣, 「山川」條, “黃山一云天在縣東五里 新羅金庾信將兵與唐蘇定方攻百濟百濟將軍階伯禦 羅兵于黃山之野 設三營…”

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은 이들 전문인력이 마음놓고 조사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설령 백제사나 백제문화에 관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관심사를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남도내의 백제유적을 조사·연구할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할 사람들도 문화재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이미 백제문화권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에 걸맞는 문화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 다른 부서와 달리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추진할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의 문화재 담당자는 문화재 자체에 대한 전문가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자는 일정 기간을 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문화행정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 론

충남지역은 백제 중·후기 도읍지가 자리했던 지역으로 당시의 문화유적이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은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것인 동시에 더없이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이러한 백제유적 이외에도 계룡산과 서해안,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계절성을 띠고 있는데 비해 백제유적은 4계절 가능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어 어느 자원보다도 개발에 유리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소득이 증대되면서 과거 조상들의 생활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백제문화권개발은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백제문화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문화 내용을 잘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현재까지 충남 도내에서 조사된 백제유적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합리적인 백제문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충남 도내에 남아 있는 백제유적의 조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거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조사지역이 공주와 부여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된 유적의 종류가 고분유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조사 유적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백제유적의 조사·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한쪽 분야로 조사의 방향이 쏠리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의 편중은 필연적으로 나머지 분야에 대한 자료 부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계획 의도와는 달리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시대미상, 국적불명의 역사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 터인데, 먼저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충남지역에 남아 있는 “백제 유물·유적 지명표”를 하루 빨리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명표가 완성되어야 어느 지역에 어떠한 유적이 있는지가 밝혀지고, 그래야 조사의 순서 및 개발 방향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명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해진 ‘백제문화권 특정지구’나 4대권 개발의 ‘백제권’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권역에 들지 못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두 번째로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거나, 분야별로 치우쳐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충청남도 문화재전문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토론장이 되어 그해 그해의 문화재 조사·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화재 행정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당국의 의지와 관련 전문가들의 책임의식이 크게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과 아울러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은 각계 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칫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책임감이 반감될 소지도 있다. 그에 비해 ‘사업소’는 백제문화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사업소’는 연구·기획 분야가 전혀 없는 만큼 ‘사업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원과 구조를 새롭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백제유적의 효과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을 담당할 새로운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루어진 백제유적의 조사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 및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누가 작성해야 되

는지 조차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조사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조사 및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전담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꼽고 싶다. 백제문화권은 신라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성장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수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명확해진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부재는 효과적인 백제문화의 조사 및 연구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전통문화학교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교되기로 예정되어 있거나 이러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조사와 연구가 진행될 때 백제사 내지는 백제문화에 대한 연구도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문인력은 학계뿐 아니라 행정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문화재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장기간 같은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충남도는 물론이고, 적어도 공주나 부여와 같은 시군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사람은 최소한 역사를 전공한 전공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전공자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고문헌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백제역사촌), 1993.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설계 보고서(최종연구보고서), 1993.
- 충청남도, 4대권개발경영구상연구, 1997.
- 충청남도·전라북도·충남발전연구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변경계획, 1998.
- 윤무병, “논산 신흥리고분군 발굴조사”, 백제문화, 7·8 합집, 공주시대 백제문화연구소, 1975.
- 안승주, “논산 표정리고분군과 출토유물”, 백제문화, 10집, 공주시대 백제문화연구소, 1977.
- 윤무병, “논산 표정리고분군”, 백제연구, 13집,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2.
- 서성훈·신광섭, “논산 표정리 폐고분”, 중도 V, 국립중앙박물관, 1984.
- 안승주·이남석, 논산 표정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안승주·이남석, 논산 옥곡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6.
- 안승주·이남석, 논산 모촌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 윤용혁, “백제문화권 개발과 충남발전”, 열린충남, 창간호, 1995.
- 박서호, “충남 백제권 개발전략”, 열린충남, 제2권 4호, 1996.
- 여흥기,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열린충남, 제2권 4호, 1996.
- 이강승, “백제문화권 개발의 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4호, 1997.
- 이남석, “충남지역 백제유적의 연구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제3권 4호, 1997.